

지속 가능한 고령화 사회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최성재

고령화사회는 인류사회 발전의 위대한 결과이고 피할 수 없는 미래다

20세기부터 평균수명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1세기 초 현재 전 세계의 평균수명은 67세(남녀 평균)에 이르렀고 선진국은 이미 80세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인구 비율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평균수명 연장과 노인인구 비율 증가를 생애주기상의 노년기 문제, 여러 가지 사회문제 중의 하나인 ‘노인문제’로 인식하였을 뿐,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화사회’¹⁾ 문제로는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1982년 UN 주관 제1차 세계고령화총회(The First World Assembly on Ageing)가 비엔나에서 개최되면서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 관심사가 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선진국에서만만 공통적 사회문제로 인식된 정도에 그쳤다. 그 후 20년이 지난 2002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1)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는 용어는 많은 경우 인구 고령화(population aging)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노인인구 비율에 따른 사회분류 중의 하나로 사용된다.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14%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21%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1%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 같은 분류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분류다. 일본의 많은 문헌에서는 UN에서 이같이 분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분류한 UN의 문헌은 발견할 수 없고 일본에서도 최근 그런 분류근거는 불확실하다 하고 있다(일본내각부, 2009). 다만 그런 분류의 근거로 찾을 수 있는 것은 UN 경제사회국에서 1956년에 출판한 *Population Studies* 26권의 제1장에서 “인구에서 65세 이상 사람들의 비율이 4% 미만이면 청년(young)인구, 4~7% 사이이면 장년(mature)인구, 7% 이상이면 고령(aged)인구라고 [연구자] 임의로 정의한다면 세계 인구의 압도적 부분은 청년인구나 장년인구이고 다만 극히 일부분만 고령인구일 뿐이다.”라고 서술한 것에서 7%와 그 배수(14%, 21%)의 아이디어를 얻어 분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흔히들 초고령사회를 노인인구 20% 이상부터라 하는 것도 7의 배수 논리에 맞지 않다(21%부터가 되어야 함). 현재 UN이나 국제학계에서는 그런 분류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노인인구 비율에 관계없이 인구가 고령화하고 있는 사회라는 의미에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령화사회라 할 수 있는 최소 노인인구의 비율을 정한다면 7%로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분류가 너무 일반화되어 있다.

제2차 세계고령화총회(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에서 고령화 현상은 선진국에는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공통적 사회문제로 공감되었고 세계화(globalization)만큼이나 미래사회의 중요한 변화동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해도 고령화 현상의 영향은 사회의 몇몇 측면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화사회 문제라는 인식은 약했다.

고령화(aging) 개념에는 개인고령화(individual aging)와 인구고령화(population aging) 두 가지 면이 있다. 개인고령화는 개인 수명(평균 [기대] 수명)이 연장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인구고령화는 사회 전체 수준에서 개인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많은 경우 개인고령화와 인구고령화는 ‘고령화(aging or ageing)’라는 용어로 통칭되고 그 의미도 때로는 각각 개인고령화, 인구고령화 또는 개인고령화와 인구고령화 모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고령화는 인류사회 발전의 위대한 업적이고 인류가 추구하여 온 장수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그것의 부정적 영향이 과도하게 부각된 결과 고령화는 인류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고 미래사회에 불안과 두려움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명연장으로 장수의 꿈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출산율도 높여 고령화사회로의 진전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주 어려운 과제이고, 출산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수명연장이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인류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진전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고령화사회는 인류사회의 발전결과로 형성되는 ‘새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과학적 입증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가 의식과 관점을 바꾸어 대응해 나간다면 고령화사회는 지속가능한 밝은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고령화는 앞서서도 언급한 개인 고령화와 인구 고령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령화사회의 영향을 인식하는 시각은 전문가든 일반인이든 상관없이 부정적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부정적 인식의 주요 원인을 정리해 보면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원인이 된다. 연령 증가에 따른 외형적 신체적 변화로 노화를 판단하거나 노인은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과 건강이 약해지고 생각과 태도가 고루하고, 사회적 및 경제적 부담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편견이나 고정관념(ageism 또는 stereotype of aging)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견이 사회에 팽배하여 비노년층뿐만 아니라 노년층까지도 노인의 수와 비율이 늘어나는 고령화사회의 도래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성재 외, 2012).

둘째, 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개인적 및 사회적 부담이 커진다는 생각이 원인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부담 논리는 노화에 따라 능력이 하락한다는 편견으로 인해 중년기 이후 교육과 훈련에 의한 능력개발 가능성을 무시하고 능력이 하락한 고령 노동자나 노인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여 복지제도로 부양해야 한다는 가정 위에서 있다. 고령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사회적 부담 논리는 아직 역사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바가 없다. 노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 논리는 인간 잠재력과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체계적 교육과 훈련을 통한 충분한 과학적 검증도 없이 노화 → 능력 하락 → 고령 노동자 유지의 비용 증가 → 생산성 하락 → 경제성장 둔화라는 단순한 논리적 유추에 불과한 것이다.

경제성장의 둔화는 기후변화, 금융위기, 세계화 등과 연계된 경기변동이 훨씬 더 큰 원인이 되더라도 불구하고 고령화를 더 큰 원인으로 부각시켜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고령화사회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논리와 가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 고령화의 사회적 부담을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들은 고령화를 ‘피할 수 없는 재앙(inexorable disaster)’, ‘인구 지진(demographic earthquake)’, ‘인구의 시한폭탄(demographic time bomb)’, ‘거대한 빚더미(colossal debt)’라 표현하여 사회적 부담이나 문제를 사실보다는 훨씬 위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중년기 이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령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도록 계속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수입 증대, 건강 유지, 자기 가치성 유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연금·기여금을 내거나 연금수급 시기를 연기시킴으로써 연금기금의 적자와 고갈을 방지 또는 지연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정년 후 반드시 노동시장 참여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활동이나 건전한 스포츠와 레저의 참여도 심리사회적 의미에서 생산적 노화를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 같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은 고령화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중매체들이 고령화사회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대중매체는 노인에 대한 편견이 일반인보다 더 심하고 고령화사회의 부정적 영향도 과장되게 자주 부각시키고 있다. 언론 보도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부각시켜 사회적 경각심을 갖게도 하지만 사실을 주관적으로 과장되게 왜곡 보도하는 경우도 많다.

넷째, 사회적 부담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의 우려도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고령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의 경우 퇴직한 노인들이 연금을 받아 상당한 정도 유복하게 살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 일부 사람들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노동세대들이 노인이 되면 현재의 노인만큼 사회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피하려는 노동세대와 계속 혜택을 받고자 하는 노인세대 간에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추정하여,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최근 OECD 국가 대상 조사에서(OECD, 2011) 노인이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소수(14% 정도)에 불과하였고, 우리나라의 여론조사(KBS 방송문화연구소, 2011)에서도 노인들을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비율이 없다는 비율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정책의 기본적 가치관의 하나는 세대 간 유대와 상호의존이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은 사회정책의 존속과 사회의 존속을 위협하는 중요한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생애과정에 대한 전통적 고정관념과 노화과정의 불가역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원인이 되고 있다. 중년기 이후 생애과정의 활동을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적 사고방식이 아직도 지배적이어서 중년기 이후의 생애과정을 새롭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노화과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 특히 노화과정의 불가역성(irreversibility, 돌이킬 수 없음)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지난 20~30년간 계속 나타나고 있는 노화과정의 가역성(reversibility, 돌이킬 수 있음)(Rowe, 1997)과 뇌 과학(brain science)의 진전에 따른 중년기 이후 능력개발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중요시하지 못하고 있다. 생애과정 진전에 따른 인간능력 개발 특히 중년기 이후 교육과 훈련을 통한 능력 개발, 노동능력 유지와 향상은 중년기 이후 체계적 능력개발을 고려하지 못하는 전통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고령화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고령화사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을 패러다임(paradigm)이라 할 수 있는데, 패러다임은 행동방식을 지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까지 전개되어 왔고 앞으로 전개될 고령화사회 현상은 현재와 같은 패러다임으로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합한 대응책을 찾아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기존 사회정책 패러다임은 앞에서 언급한 고령화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그대로 가정한 것으로 노인을 원칙적으로 퇴직이라는 사회적 제도로 사회의 주류에서 배제하여 다만 사회복지 내지는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가 사회의 경제

적 약자와 사회적 능력 약자 등의 일부 계층의 욕구 해결의 잔여적 복지(residual social welfare)에서 사회구성원 전체의 공통적 욕구 해결의 제도적 복지(institutional social welfare)로 지향하고 있지만 노인은 사회복지의 중요한 1차적 대상자로 되어 있고 사회적 보호의 대상자가 되고 있다. 노인을 사회가 보호해야 할 측면도 있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수적 비중이 커지고 있고, 건강이 크게 향상되고 있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고, 또한 역량강화(empowerment)로 능력 향상이 가능한 노인을 사회의 주류에서 제외하여 보호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노인의 가치성과 자존감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기존의 고령화 대응책은 고령화사회 현상의 부정적 영향을 강화시키거나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 영향을 과장시키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인생주기 및 생애과정, 인간의 능력, 노화에 따른 생산성, 인구학적 요소에 의한 사회적 부양인구 규정, 복지제도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 등에 대한 기존의 이론과 가치관의 틀로서 고령화사회의 문제를 예단하거나 추론하는 것은 부정적 영향을 부각시킬 가능성을 높여주고 합리적 대응책을 찾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령화 현상은 더 이상 노인문제라는 ‘하나’의 사회문제가 아니라 그 범위와 영향은 국가 사회의 체계 전체에 연계되어 있는 ‘사회전체의 문제’이다. 고령화 현상은 이제 사회문제의 주된 해결 제도인 복지제도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복지제도에 의한 해결책은 그 범위가 좁고 대부분의 경우 사후의 치료 내지는 표출된 문제해결 위주로 되기 때문에 더욱이 근본적 대응책이 될 수 없다.

고령화 현상은 국가사회 전체와 관련된 현상이고, 고령화사회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으로서는 고령화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대응책을 적합하게 창출해 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령화사회를 지속가능하고 발전가능하게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정책적 패러다임의 이론적 근거는 기존의 이론과 국제기구의 권고안 및 조사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활용한 이론과 이론적 모형은 (1) 기능주의 이론(functionalism), (2) 사회체계 이론(social system theory), (3) 연령계층화 이론(age stratification theory), (4) 생애과정이론(life course theory), (5) 성공적 노화 이론

(successful aging model), (6) 활동적 노화 이론(active aging model), (7) 새로운 노화 이론(new aging), (8) UN 1999년 세계노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 주제(‘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사회[A Society for All Ages]’), (9) UN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AA)’, (10) 노화와 생산성 유지/향상 가능 이론, (11) 제3기 인생론과 (12) 뇌 과학 이론 등이다.

기능주의 이론에 의하면 사회체제인 국가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4가지 중요한 기능(적응, 목표달성, 통합, 잠재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한 기능을 수행하는 하위체제도 다시 4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체 사회체제(국가)는 체계의 내외부로부터 노인복지를 위한 자원을 동원하여 배분하여야 하고(적응 기능), 다른 하위체제의 목표와 연계하여 노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여야 하고(목표달성 기능), 노인계층을 사회체제 전체를 구성하는 주요 하위체제로서 사회체제 전체에 통합시켜야 하고(통합 기능), 또한 노인세대에 대한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고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잠재성 기능) 전체 사회체제의 생존이 가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사회체제이론은 상위체제와 하위체제의 상호 의존성과 교환성을 강조하고, 사회체제가 생존하고 발전하려면 사회체제를 유지시키는 에너지를 새롭게 공급하고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체제는 일반적인 물리적 구조(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 물질 체계에서는 에너지가 소멸되고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 원칙임: entropy의 증가)와는 달리 생물학적 유기체와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각각의 하위체제 간에 에너지를 새롭게 공급하고 상호 교환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유기체 내의 에너지는 질서정연하게 되고 증가하게 됨: negentropy의 증가). 사회체제이론에 따르면 노인계층도 사회의 한 하위체제로서 노인이 가진 자원을 새롭게 하고 이를 사회의 다른 하위체제에 공급하거나 교환할 수 있어야 체계 간 상호 교환성을 높이고 사회체제가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령계층화이론에서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연령등급에 의해 구분되는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열화되어 있다고 본다. 각 연령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역할 수행의 능력이나 의지도 다르고 기대되는 역할도 다르고 또한 사회에서 부여하는 권리와 특권도 다르다. 따라서 노인층은 다른 연령층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역할을 찾아야 하고 그 속에서 노인에게 활용 가능한 여러 지위와 역할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연령계층화 이론은 노인층에 그들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생애과정이론에서는 인생과정 또는 노화과정은 역동적이고 상황적 맥락 속의 과정이며, 개인의 발전은 생애과정을 통해 계속되고, 한 생애과정은 과거의 삶과 미래의 기대와 연계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화과정은 전체 생애에 걸친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노후의 삶은 과거 삶의 축적된 결과로도 볼 수 있으며, 사회적 및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생애단계는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생애 전체의 각 과정에서 연령에 별로 관계없이 사람들은 학습, 일, 여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 일, 학습, 여가 어느 것을 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또한 중년기를 연령적으로 65세를 넘어 70세나 75세까지로 연장할 수도 있고, 따라서 노년기를 75세 이후로 규정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생애단계의 연령적 정의는 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Rowe와 Kahn(1998)에 의해 제안된 성공적 노화 모형에서는 성공적 노화의 주요 요소를 ① 질병 피해가기, ② 인지적 및 신체적 기능 높게 유지하기, ③ 사회 참여의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 성공적 노화 모형은 “왜 80대의 어떤 노인은 크로스 건츄리(cross-country) 스키를 타고 있는데 어떤 노인은 요양원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10년간 진행된 추적연구를 한 결과를 요약 것이다. 이 연구과정에서 Rowe(1997)는 노화과정의 불가역성(irreversibility)에 사로잡혀 있는 전통적 의생물학적(bio-medical) 사고와 이에 따른 사회과학적 및 사회정책적 사고에서 벗어나 노화과정의 가역성(reversibility)을 주목할 것을 제안하였다. 질병을 피해간다는 것은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질병의 대부분은 습관병(성인병)이고 이러한 질병의 거의 70%는 유전적 요인이 아닌 개인적 및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개입으로 노화과정에서 질병을 대부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화과정은 일반적으로 퇴화하여 기능이나 상태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불가역성)이 아니라 가능한 부분(가역성)도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건강 조건 외의 중요한 성공적 노화의 요소로 사회참여를 꼽고 있는 것도 의식적 노력으로 노화과정의 가역성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이론은 개인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인이 성공적 노화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노력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은 사회가 마련해 주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활동적 노화 모형은 노년학의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 WHO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적 노화의 개념과 정책적 틀을 제시하면서 활동적 노화를 ‘사람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건강, 참여 및 안전의 기회를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WHO의 활동적 노화 모형에서는 활동적 노화의 기본요인으로 ① 건강 유지와 증진, ②사회참여, ③ 안전의 보장을 제시하고 전 생애 과정에서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노화 모형은 ① 세대 간 이해관계, ② 다양성과 ③ 장수(오래 사는 것)라는 3가지 요인이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사회적 대응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 주장하였는데 이는 노인과 노인에 대한 사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1998년 UN 총회에서 1999년을 세계노인의 해를 선포하면서 그 주제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사회(a society for all ages)”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노인의 사회 주류화를 강조하였으며, 2002년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UN 주관 제2차 세계고령화대회에서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 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AA)은 회원국 정부가 ① 사회참여, ② 건강과 복지의 증진 및 ③ 가능하면서 지지적인 환경의 조성이라는 3가지를 주요정책 행동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시하였고, 행동계획의 실천전략으로서 노인의 사회 주류화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이론(이론적 모형)과 UN의 정책권고안 외에 노화와 생산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노인의 생산성 또는 직업능력의 향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노화에 따라 능력이나 직업능력이 하락한다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고 연구결과도 “노화에 따라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일반적 상식이나 가설에 대해 상반되거나 불확실한 경우도 많다. 그리고 노인의 생산성은 훈련에 의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성공적 노화의 모델을 제시한 Row와 Kahn(1998)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부족으로 건강유지와 정신적 및 신체적 기능 유지를 하지 못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45세에서 80세까지 200명을 12년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제3기인생론(the Third Age: Sadler, 2000)에 의하면 자신의 의지와 새로운 태도에 의해 중년기 이후 새로운 직업이나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제2의 성장을 도모하여 성공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뇌 과학의 진전으로 뇌는 사용할수록 신경세포가 새로 생성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기능적 영역도 바뀌고 학습능력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Garrett, 2013). 이상의 연구로 보면 적어도 70대까지는 노화에 따른 생산성은 훈련이나 개인적인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 따라 유지 또는 향상될 수도 있다고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연령통합사회 패러다임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고령화 현상을 사회전체의 변화와 연계된 것으로 보고 향후 고령화사회를 지속가능하고 발전지향적인 새로운 미래사회로 구축하기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이론(이론적 모형), UN 정책 권고안, 그리고 노화와 생산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고령화사회를 ‘연령통합사회’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령통합사회 패러다임은 핵심적으로 노년세대를 사회의 주류에 계속 포함시켜 모든 세대가 함께하지 않으면 고령화사회는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령통합사회는 사회 차원에서 변화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회 모두에서 변화시켜 나가야 할 핵심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령 아닌 능력 위주 사회 지향: 사회는 편견과 비과학적 요소가 많은 연령기준으로 개

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을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능력을 평가하여 사회적 처우와 역할을 결정한다(기능주의 이론, 생애과정 이론, 새로운 노화 이론, 노화와 생산성 유지/향상 가능 이론 반영).

(2) 노년층에 대한 사회보장: 사회는 노년층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유지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능주의 이론, 사회체계 이론, MIPAA 반영).

(3) 융통성 있는 생애과정 구분: 사회는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연장 및 사회적 의식 변화에 따라 중년기와 노년기를 구분하는 연령을 70세 나아가서는 75세까지로 융통성 있게 연장하고 이에 따라 사회경제 제도도 상응하게 변화시켜 나간다(생애과정 이론 반영).

(4) 노년층 지식과 기술 활용기회 제공: 사회는 노년층이 현재까지 축적하여 온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제공한다(기능주의 이론, 연령계층화 이론, 성공적 노화 이론, 활동적 노화 이론, MIPAA, 반영).

(5)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사회는 중년기부터 능력개발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훈련과정을 제도화하여 노년기까지 생산성(경제적, 심리적 및 사회적)을 유지 또는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에 계속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경험과 지식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중년기 이후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중년기 이후에도 능력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성공적 노화 이론, 활동적 노화 이론 반영, MIPAA, 뇌 과학 이론).

(6) 노화과정 이해 및 노후준비 교육 기회 제공: 사회는 국민들이 평생교육 과정을 통해 노화과정을 이해하고 평생 건강관리와 노후 준비의식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는 특히 중년기 이후 사람들의 노화 및 노년층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제공하고 개인적 용기와 노력의 역량을 키워 줄 것이다(기능주의 이론, 생애과정 이론, 성공적 노화 이론, MIPAA, 제3기인생론 반영).

(7) 노년층 능력에 따른 적합한 역할 부여와 활동적 노화 증진: 사회는 노년층에게 능력에 따라 적합한 노동시장 참여와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의 사회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활동적 노화를 증진한다. 이는 복지비용을 포함한 고령화 관련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기능주의 이론, 사회체계 이론, 생애과정 이론, 성공적 노화 이론, 활동적 노화 이론, 세계 노인의 해 주제, MIPAA 반영).

(8)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및 고령친화 산업 조성: 사회는 일상생활에서 노년층의 신체적 독립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의 주거, 교통, 여가, 문화 시설과 서비스를 고령친화적으로 조성하고, 노년층의 일상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정보, 통신, 의학, 과학과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산업을 조성한다(기능주의 이론, 사회체계 이론, 활동적 노화 이론, MIPAA 반영).

연령통합으로 열어가는 고령화사회는 밝은 미래가 될 것이다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질적으로 다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고령화사회가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고령화사회를 바람직한 새로운 미래사회로 만들기 위한 시간은 아직도 충분하다. 제시한 연령통합사회 패러다임은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에 근거를 두고 우리의 의식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새로운 고령화사회 구축은 어떤 의미에서 21세기 전반기를 사는 우리 국민들이 도전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 생각한다. 제시한 패러다임만으로 고령화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에 부족할지 몰라도 적어도 크게 기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평균수명이 100세까지 연장되어도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계층이 함께하면서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고령화사회는 연령통합사회 패러다임에 따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정부, 기업, 언론, 시민사회, 전문가, 노동 분야의 모든 국민이 같이 노력함으로써 이루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고령화사회 대응책은 정권 차원이나 단기적으로 주도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지속적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사회의 각계각층의 협조 하에 정부가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최성재 외(편집)(2012).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화사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KBS 방송문화연구소(2011). 여론조사.
일본내각부(日本内閣府)(2009). 『高齢社會白書』. 東京: 内閣府.
Garrett, M. D. (2013). Brain plasticity in older adults. *Psychology today* (Apr. 17, 2013).
OECD (2011). Paying for the past, providing for the futur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Background paper of session 3 for the OECD Ministerial on Social Policy held in Paris on May 2-3, 2011).
Rowe, J. W. (1997). The New Gerontology. *Science*, 278, 5337, 367.
Row, W. R. & Kahn, R. L.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Dell Publishing.
Sadler, W. (2000). *The third age: 6 principles for growth and renewal after forty*. Cambridge, MA: Da Capo Press [김경숙 역.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 서울: 사이].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Social and Economic Affairs (1956). *Population studies*, No. 26 (The aging populations and its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New York: United Nations.